



주간통일정세 2011-44(2011.10.24~10.30)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1-44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정치

- **北당·내각, 中참전 기념 '우의탑'에 헌화(10/24, 조선중앙통신)**
  - 중국인민지원군의 6·25 참전 61주년을 하루 앞두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이 공동명의로 회관을 '우의탑'에 헌화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전함.
  - 헌화행사에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식 보건상 겸 조중친선협회 위원장, 김성남 당 중앙위 부부장, 김철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보경 인민보안부 부부장, 김성기 외무성 부상, 구본태 무역성 부상 등이 참가
  
- **김정일, 방북 리커창 中부총리 면담(10/2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4일 방북 중인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를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김 위원장은 면담에서 평양에서 이뤄진 북중간 회담이 잘된 것에 대해 평가하고 전통적인 양국간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 시키려는 노동당과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힘.
  - 리 부총리도 "중조(중북) 최고 영도자들 사이에 이룩된 광범위한 합의들을 성실히 이행하며 시종 전략적인 높이와 전망적인 각도에서 중조관계를 틀어쥐고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정신을 견지함으로써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공고발전 시키지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화답
  - 면담에는 북측에서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일·김양건 당비서 등이 배석했고, 중국 측에서 여우취엔 국무원 부비서장, 장즈권(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 천위안 국가개발은행 이사장, 류제이(劉結一) 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류테난(劉鐵男)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천젠(陳健) 상무부 부부장 등이 함께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정은 대장동지' 일제히 호칭(10/25, 연합뉴스)**
  - 북한의 매체들이 2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일제히 '대장동지'로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등 북한의 매체들은 이날 김정일 위원장과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의 면담 사실을 보도하면서 배석자 명단에서 김정은을 '대장동지'로 소개했다고 뉴스는 전함.
- 김정은 호칭이 '대장동지'라는 사실은 그가 후계자로 공식화되기 이전의 교양(교육)자료나 그를 찬양하는 플래카드 등에서 확인됐으나, 북한의 매체들은 그동안 김정은을 다른 고위인사들과 마찬가지로 '동지'로 칭해옴.
- 북한이 김정은에게 '대장동지'란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그동안 '대장복(福)' '발걸음'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김정은이 후계자임을 암시해온 데서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후계자임을 공식화한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

#### ● 北최영림 총리 농업과학원 현지 요해(10/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25일 농업과학원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了解·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최 총리는 농업과학원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성과를 요해했다"며 "중자혁명과 다수확 품종의 확보를 강조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강구했다"고 전함.
- 그는 21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당·정 간부들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4일 다녀간 대동강 돼지공장 및 자라공장, 그물공장 등을 참관

#### ● 北총리, 中화전집단공사 사장 면담(10/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완공민 중국 화전집단공사 사장을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중앙통신은 "최영림 내각 총리는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완공민 중국 화전집단공사 총경리 일행을 만나 담화했다"며 "이 자리에는 허택 전력공업상, 김형식 석탄공업상, 신남철 조선영광개발총회사 총사장과 왕즈린(王治林)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경제무역 참사가 배석했다"고 전함.

#### ● 김정일·정은, 자강도 공장 5곳 현지지도(10/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대동하고 자강도의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 장자강공작기계공장, 2·8기계종합공장, 희천연하기계종합공장, 희천정밀기계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9일 보도
- 현지지도에는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



- 방위 부위원장, 박도춘 당비서, 리재일·박봉주 당 제1부부장,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현철해 국방위 국장 등이 수행
- 김 위원장은 강계뜨락또르종합공장의 CNC(컴퓨터수치제어)화된 생산 공정에 만족감을 표하고 공장에 새로 건설된 도서관을 돌아본 뒤 공장의 노력 혁신자, 과학자, 기술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방송은 전함.
- 김 위원장은 또 장자강공작기계공장의 현대화·과학화를 실현한 데 대해 김일성 훈장을 수여할 것을 제의하고 공장 기동예술선동대의 공연을 관람
-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건설하려는 경제강국은 지식경제형 경제강국"이라며 "이것은 적은 자원, 적은 노력, 적은 에너지로 보다 많은 물질적 부를 창조할 수 있게 하는 CNC화, 무인화를 실현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말함.

■ **김정일동향**

- 김정일, 10.24 '리커칭' 中 국무원 부총리 접견 및 만찬 마련(10/24, 중통)

### 나. 경제

#### ● 北, 벼 추수 완료(10/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올해 농촌에서 벼 가을(벼 추수)을 마무리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4일 보도
- 중앙방송은 "평양 만경대구역의 농업 근로자들이 12일 선참(처음)으로 끝낸 데 이어 순안, 형제산, 역포구역 등 모든 농장이 17일까지 벼 가을을 마감했다"고 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평안북도는 매일 8%씩 추수하는 성과를 냈고 서해의 곡창 지역인 황해남도도 1만여 정보(약 99km<sup>2</sup>)에서 벼를 추수
- 중앙방송은 "함경북도, 자강도를 비롯한 북부지대 농촌들에서도 불리한 일기조건을 이겨내면서 벼가 익는 족족 제때에 수확했다"고 덧붙임.

#### ● 유니세프, 중증영양실조 北어린이 실태조사(10/25, 미국의소리(VOA))

-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이 북한 함경도, 양강도, 강원도에서 어린이 영양실태를 조사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전함.
- 유니세프 아시아 사무소의 제프리 킬리 대변인은 이 방송에 "북한 당국과 함께 중증 영양실조 어린이를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어린이들을 치료할 예정이며, 올해 1만5천500명의 어린이 중증 영양실



조를 완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함.

- **北고려항공에 잇단 흑평...WHO는 이용금지령(10/25, 미국의소리(VOA))**
  - 세계보건기구(WHO)가 직원들에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북한의 국적 항공사인 고려항공을 이용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5일 전함.
  - 방송에 따르면 WHO 동남아시아 사무소는 지난 5월 내부용으로 작성한 항공사 안전등급표를 통해 고려항공에 C등급을 부여했는데, 이는 여행 승인 담당관의 특별한 허락 없이는 이용해서는 안 되는 항공사라는 뜻임.
  
- **1~8월 北美교역 작년동기 7배로 급증(10/26,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1~8월 북미교역액이 21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간 30만 달러의 7배에 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
  - 미 인구조사국 산하 해외무역실 교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북미 교역은 미국의 대북수출만 210만 달러였고 수입은 한 건도 없었으며, 1~8월 교역액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양국 간 교역액 190만 달러도 넘어섰다고 방송은 전함.
  - 미국의 대북수출 상품을 보면 민간단체들이 대북지원용으로 보낸 구호 물품이 대부분으로, 의약품이 절반가량 차지했고 나머지는 축산·수산 식품, 수술 장비, 침구류, 재봉도구 등이었음.
  
- **WFP "10월 대북식량지원 올해 최대 규모"(10/26,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소리(VOA))**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10월 한 달 동안 북한주민 197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지원 담당관을 인용해 26일 보도
  - 이는 WFP의 최근 1년간의 월별 대북 지원식량을 놓고 볼 때 가장 큰 규모이며, 스카우 담당관은 RFA 측에 10월에만 약 1만4천톤의 곡물이 북한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지난달의 4천톤보다 3배 이상 많은 곡물을 확보하면서 지원 규모도 커졌다고 설명함.
  - 한편 핀란드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과 수재민 구호를 위해 95만 달러를 국제적십자사에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함.
  
- **"北-中, 압록강 중류 벌등도 개발 구상"(10/26, 요미우리신문)**
  - 북한과 중국이 압록강에 있는 북측 섬인 벌등도(筏登島)를 관광지로 공동 개발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중국측 지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
  - 벌등도는 중국 지안(集安)과 북한 자강도 만포(滿浦) 사이의 압록강 중류에 있고, 면적은 약 25ha이며, 지난달 지안과 만포를 잇는 새로운 다리를 만드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강 하류 쪽으로 10km 정도 내려간 곳에 있는 지역임.



- 이 섬에 북한 식당이나 토산물 판매점을 짓고, 북한 예술단체의 공연을 하게 한 뒤 지안과 별등도를 유람선으로 잇자는 게 개발 구상의 골자이며, 별등도는 북측 육지와 떨어져 있어 북한이 사람이나 물자의 출입을 관리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짐.
- 올 5월말 만포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의 대표단이 지안을 방문해 별등도 공동 개발 문제를 논의했으며, 북한과 중국은 두만간 하루 접경 도시인 북한 라선과 중국 훈춘(琿春), 압록강 하류 접경 도시인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을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했다고 신문은 전함.
- 요미우리신문은 "북중 국경 지대에서 북쪽 끝인 라선-훈춘과 남쪽 끝인 신의주-단둥에 이어 중부 지역에서도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풀이

#### ● 北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 내달 완공(10/26, 연합뉴스)

- 중국이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라진항 활용을 위해 착수한 북한 원정리-라진항 구간 도로 보수공사가 내달 중순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연변(延邊) 소식통들은 27일 원정리-라진항 구간 도로 보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내달 15일께 완공된다고 밝힘.
- 한 소식통은 "이미 2차선 비포장도로의 포장과 선형 개선 작업이 완료됐고 정리 작업을 하는 중"이라며 "북·중이 내달 15일께 완공을 자축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함.
- 중국은 지난 1월 처음으로 1만7천t을 라진항에서 상하이로 운송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10만t 가까운 훈춘산 석탄을 남방으로 수송했으며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가 끝나면 운송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 "北, 석탄 수출 잠정 중단..내년 봄 재개"(10/27, 연합뉴스)

- 27일 중국 선양(瀋陽)의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자국 무역상들에게 석탄 수출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한 중국 무역상은 "며칠 전 북한 파트너로부터 상부의 지시에 따라 당분간 석탄 수출이 어렵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미 계약한 물량 이외에는 북한산 석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올해 북한의 석탄 수출량이 급증, 내수용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갈수기라 수력 발전소 기동이 안 되는 겨울철에 전력과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함.
- 한 대북 무역상은 "외화벌이를 전적으로 석탄과 철강 등 지하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북한으로서는 금수 조치를 오래 끌고 갈 수 없는 처지"라며 "연료 사용이 감소하는 내년 봄께 수출이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봄.



- **北 '광물보고' 단천항 내년 4월 개항할 듯(10/28, 연합뉴스)**
  - 북한이 광물 자원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해온 함경남도 단천항 현대화 사업이 내년 4월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28일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정박지와 방파제 등 단천항 항만 개선 공사가 완공 단계에 들어섰으며 수심을 12-15m로 유지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뉴스는 전함.
  - 한 소식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단천항을 시찰, 공사 진척 상황을 살핀 뒤 흡족해하며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며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0번째 생일인 내년 4월 15일 대대적인 완공식과 함께 단천항을 개항할 예정"이라고 전함.
  - 북한은 단천항에 1만-3만급 선박 3척을 동시 정박할 수 있는 접안 시설을 건설했으며 항만과 단천 마그네사공장, 단천 제련소를 잇는 벨트 컨베이어를 설치,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물자 운송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함.
  
- **中, 북한산 면화 첫 수입(10/28, 국문시보(國門時報))**
  - 중국이 처음으로 북한산 면화를 수입했다고 중국 국문시보(國門時報)가 28일 보도
  - 신문은 저장(浙江)성 자싱(嘉興)의 한 무역업체가 수입한 북한산 면화 68.5t이 최근 상하이를 통해 입항했다고 전함.
  - 북한산 면화가 중국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면화는 kg당 2.3달러(2천550 원)로 총 수입액은 15만7천550달러(1억7천400만 원)임.
  
- **자금세탁방지기구, 대북금융제재 최고수준 유지(10/28, 연합뉴스)**
  -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는 28일(현지시간) 북한에 부과한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주(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대표부(대사 허경욱)는 FATF가 27-28일 총회를 열어 북한의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방지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 이번 총회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회원국은 없었다고 OECD 한국대표부는 전함.
  - FATF는 지난 2월 북한이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비협조 국가로 분류된 이후에도 관련 제도를 충분히 개선하지 않았다면서 금융제재를 기존 '주의조치'에서 이란과 같은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로 상향 조정함.
  - FATF는 1989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34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걸프협력위원회(GCC) 등 2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 **유엔, 대북 식량지원 긴급 호소(10/29,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OCHA)의 발레리 아모스 국장이 지난 27일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고 국제사회가 대북식량 지원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전함.
  - 아모스 국장은 호소문에서 "북한 주민 600만 명에 긴급 식량지원이 필요하지만 유엔이 올해 대북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에 호소한 예산 2억1천800만 달러 중 7천400만 달러만 걷혀 30%만 확보된 상태"라고 밝힘.
  - 그는 또 "북한에서 5세 미만 어린이 3명 중 한 명이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
  - 이어 "국제사회 기부국의 지원이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 자료와 정보의 공유가 중요하다"며 "북한 당국은 분배감시(모니터링)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아모스 국장은 지난 17~21일 북한을 방문해 함경남도과 강원도의 병원, 탁아소, 가정, 농장, 시장 등을 둘러보고 식량부족 실태를 파악했다고 방송은 전함.
  
- **"北, 2013년까지 유연휘발유 사용 근절"(10/29, 연합뉴스)**
  - 2013년까지 북한에서 유연휘발유 사용이 근절될 것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9일 유엔환경계획(UNEP)을 인용해 전함.
  - UNEP는 전날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이라크, 미얀마, 예멘 등 6개국이 유엔과 협력해 2013년까지 유연휘발유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힘.
  - 선진국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유연휘발유 사용을 금지했지만 아직 북한을 포함한 6개국은 유연휘발유를 쓰고 있으며, 북한은 올해부터 무연휘발유를 판매하면서 유연휘발유와 무연휘발유를 함께 판매하는 국가로 분류됐다고 뉴스는 전함.





### ■ 기타 (대내 경제)

-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10.21), 黃南 연안군 송호협동농장 5작업반 前 농장원 '리성진'에게 '노력영웅칭호와 국기훈장 1급' 수여(10/24, 중통)
- 평양시 만경대·형제산구역 등 모든 농장들에서 "올해 '벼가을'(추수)을 성과적으로 마감" 선전(10/24, 중방)
- 北 부품질석생산사업소(平南 순천시 소재) 생산 '부품질석', "평양시 살림집 및 공공건물 방온·방습 재료로 널리 이용" 선전(10/24, 중방)
- 北 수도건설총국 건설자들, '인민야외빙상장'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中(10/24, 중방)
- 대동강자라공장·대동강돼지공장·대동강그물공장, 10.25 리명수(인민보안부장)·리병삼(조선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 참가下 "김정일 현지말씀 관철" 위한 종업원 쫄기모임 촉촉 진행(10/26, 중방)
- 北, [2.8비날론연합기업소 현대화에 관한 조선중앙통신사 상보(10.26)]를 통해 "함남의 불길이 낳은 자랑스런 결실"이라고 강조하며 "2012년을 향해 나아가는 대고조 진군길에서 이룩된 비날론공업의 천지개벽은 나라의 경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激讚(10/27, 중통)
- 최영림 내각총리, 10.27 중국화전집단공사 총경리('원국민') 일행과 담화(10/27, 중통)
  - 허택(전력공업상), 김형식(석탄공업상), 신남철(조선영광개발총회사 총사장), 왕즈린(駐北 中 경제무역참사) 등 참석
-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평양시 청춘거리) 조업식, 10.27 최룡해(黨 비서), 박명철(체육상/조업사) 등 참가下 진행(10/28, 중방)

## 다. 군사

### ● 북한군 대표단 베트남 방문(10/29, 베트남통신(VNA))

- 오철산 해군 정치국장(상장)이 이끄는 북한군 대표단이 베트남을 방문했다고 국영 베트남 통신(VNA)이 29일 보도
- 북한군 대표단은 28일 오후 응오수언릭 베트남군 총정치국장(중장)을 예방했으며, 이 자리에서 릭 국장은 북한군 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양국 군과 인민 간 우호 증진과 상호 이해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VNA는 전함.
- 오철산 정치국장도 이번 베트남 방문이 당(黨) 활동과 군 정치사업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
- 북한군 대표단은 베트남군 해군사령부, 정치학원, 해군연구소, 7군구 총사령부 등을 방문할 것이라고 VNA는 덧붙였다.



라. 사회·문화

● '김일성상' 계관시인 오영재 사망(10/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김일성상' 계관시인인 오영재(75)씨가 23일 갑상선암으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그의 서거에 대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고가 23일 발표됐다"며 "조국과 인민 앞에 세운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북한 시문학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1989년 '김일성상'을 수상했고, 1995년 12월 '노력영웅' 칭호에 이어 북한 최고 훈장인 김일성훈장을 받음.

● 인세반 "北의료진도 내성결핵 감염"(10/27, 연합뉴스)

- 지난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인세반(미국명 스테븐 린튼) 유진벨재단 회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보건성 관계자가 북한의 보건문제 1위도 결핵, 2위도 결핵, 3위도 결핵이라고 할 정도로 결핵 환자가 많다"며 북한 결핵치료사업에 관심을 촉구
- 인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서 결핵 환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이 다제내성결핵에 감염되는 등 북한 전역에서 다제내성결핵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평양 인근 3곳 등 6개의 다제내성결핵 치료센터를 운영해 600여명의 환자를 치료하고 있지만 센터마다 100명이 넘는 대기환자가 있을 정도로 예산과 인력, 설비가 모자란다"고 말함.
- 한편 인 회장은 이번 방북때 한 프랑스 지원단체의 부탁으로 황해남도 해주에 옥수수를 전달하고 돌아왔으며 "최근 중국과 가까운 북부 지역은 경제활동이 활발하지만 한국과 가까운 남쪽으로 갈수록 경제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확연하게 관찰됐다"고 전함.

● 北TV에 '과감한 노출' 잇따라 등장(10/28, 연합뉴스; 조선중앙TV)

- 북한 조선중앙TV가 최근 외국영화 속에 등장하는 노출 장면을 잇따라 내보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조선중앙TV는 27일 저녁 8시30분 옛 소련의 예술영화 '전화로 보내오는 선물'을 방영하면서 젊은 여성들이 야한 복장을 입고 춤추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냈는데, 19세 이상만 관람해야 하는 남한의 성인영화와 노출 수위에 별 차이가 없었고, 남한 지상파 TV라면 방영하기에 부담을 느낄 정도였다고 뉴스는 전함.
- 또한 조선중앙TV는 일주일 전인 지난 20일 저녁에는 중국 예술영화 '영웅 정성공(鄭成功)'을 방영하면서 상반신을 드러낸 여배우가 욕조에서 목욕하는 장면을 방영했는데, 북한TV가 영화나 드라마를 방영하면서 이처럼 야한 장면을 내보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뉴스는 설명
- 특히 주민이 많이 시청할 수 있는 저녁 시간대에 방영하고 영화를 북한



말로 더빙하는 노력을 기울인 점도 이례적이었으며, 이는 폐쇄적 국가인 북한이 외부의 시각과 달리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의 노출에 항상 민감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뉴스는 전함.

- 한편 북한에서는 장마당 등을 통해 한국영화를 비롯한 외부문화가 확산하고 있고 성문화도 점차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재스민혁명' 중동에 근로자 파견 중단"(10/2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민주화 바람이 계속 불고 있는 리비아, 이집트 등 중동지역에 대한 근로자 파견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
- 이 방송과 연락이 닿은 평양 주민 박모씨는 올해 리비아에 건설 노동자로 파견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북한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함.
- 중동의 한 국가에 간호사로 나갈 예정이었던 20대의 김모씨도 북한 당국으로부터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대기 중이라고 RFA는 소개
- RFA는 "리비아와 이집트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계획이 무산됐을 개연성이 크다"며 "북한이 노동자 파견마저 사실상 금지해 외화벌이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앞서 북한은 '재스민 혁명'의 영향을 우려해 리비아에 체류하고 있는 교민 200여 명에게 귀국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 기타 (대내 사회 · 문화)

- 北 피바다가극단 출연 가극 '양산백과 축영대' 첫 공연, 10.25 中 지린성 장춘에서 진행(10/27, 중통)

## 2. 대외정세

### 가. 일반

● 패네타 "北, 무모하고 도발적 행동 계속"(10/24, 요미우리신문)

-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일본 방문에 앞서 요미우리 신문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라는 도전을 맞아 미국과 일본 간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
- 그는 "북한이 무모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핵무기와 탄도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일본뿐만 아니라 역내 전체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군사력을 빠르게 현대화하고 있지만 투명성이 부족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점점 독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고 우려

- 그는 "미국과 일본이 함께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고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 방북 리커창 부총리, 김영남 면담(10/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을 방문 중인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2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담화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조(중북)친선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강화발전되고 있다"며 "조선인민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함.
- 담화에는 북한 측에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영일 당 비서, 김성기 외무성 부상, 구본태 무역성 부상이, 중국 측에서는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 천위안 국가개발은행 이사장, 류제이(劉結一) 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류테난(劉鐵男)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등이 배석

#### ■ 기타 (대외 일반)

- 【조선중앙통신 논평】 최근 美 외교당국자의 對北 인권문제 제기 는 "우리(北)에 대한 엄중한 국권침해·인권침해"라며 "인권외교는 대화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발(10/25, 중통)
- 중국 인민군 「韓國戰」參戰('50.10.25) 61돌 즈음 "우리(北)는 조중 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北-中 친선 不敗' 力說(10/25, 중통·노동신문)

#### 나. 6자회담(북핵)

#### ● 中리커창 "6자회담 조속 재개해야"(10/24, 신화통신)

- 중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힘.
- 2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부총리는 전날 최영림 북한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국은 조선(북한)이 접촉과 대화라는 정확한 방향을 견지해나가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함.
- 부총리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지키는 것으로 관련국들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며 "반도 정세를 한층 더 완화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지켜야 한다" 강조
- 그는 북한과 중국이 과거 60년 동안 서로를 지지하면서 우호적인 이웃으로서의 관계를 공고히 한 것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고 평가



- 리 부총리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양국의 전통적 우의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양국이 ▲정부 주도 ▲기업 중심 ▲시장 원리 ▲상호 윈윈의 4대 기본 원칙의 바탕 위에서 실무적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제안
- 최 총리는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해 전면적으로 9.19 공동성명을 실천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자고 주장한다"며 "이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함.

● **中 "북미대화, 6자회담 재개 여건 만들길"(10/24,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24일 북한과 미국의 제2차 고위급 회담 개최와 관련해 "(해당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와 유관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을 창조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장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미 접촉과 대화를 지지하며 현재의 대화는 서로 신뢰를 증진하고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 대변인은 이어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의 북한 방문에 대해 확인하면서 "중국과 북한은 고위층 상호 방문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강조

● **보즈워스 美특별대표 "일부 진전 있다"(10/25, 연합뉴스)**

- 제2차 북미 고위급 대화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4일(현지시간) 첫날 회담을 마친 뒤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날 북한 대표단과 공식회담 후 주(駐)제네바 미국대표부에서 만찬 회동을 한 뒤 숙소인 캠프스키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우리의 목표는 양자 및 다자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회의를 하고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
- 그는 논의 주제를 묻는 말에 "모든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농축축프로그램(UEP)도 논의됐느냐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음.

● **中 "농축우라늄 문제는 6자회담서 해결"(10/25,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의 장위(姜瑜) 대변인은 25일 "농축우라늄 문제는 6자회담 내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장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3~25일 리커창(李克強) 상무부총리의 방북 기간에 북한의 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문제가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함.
- 그는 그러면서 "북한과 미국이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 접촉 중 인 만큼 이번 대화에서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성과를 내 6자회담이 재개의 조건을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 **북미고위급대화 종료..6자 재개조건 등 진전(10/26, 연합뉴스)**
  -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한 북한 핵 및 인도적 지원 등을 의제로 한 북한과 미국의 2차 고위급 대화가 이틀 만인 25일 오후(현지시간) 종료됐으며,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당초 예상됐던 대로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회담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측 대표단장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회담을 마친 뒤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련의 커다란 전진이 있었다"고 밝힘.
  - 김 부상은 "1차 대화 때 합의한 데에 따라 조미(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신뢰구축 조치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고 밝힌 뒤 "아직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문제도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고 다시 만나 풀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함.
  - 미 측 대표단장인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같은 시간 제네바 주재 미국대표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우 유용한 회담이었다"며 "북한 대표단과 매우 긍정적이고 전반적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평가했다.
  - 하지만,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양측의 지속된 노력으로 6자회담 재개를 논의하는 정식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합리적인 토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간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해 김 부상의 발표보다 신중한 표현을 사용함.
  - 북미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 문제와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양측이 언급한 '진전'의 내용과 관련,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나 대량살상무기(WMD) 모라토리엄 선언 등에 일부 진전된 입장을 내놨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그러나 핵심 사안인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북핵 문제 해결의 공은 남북 및 북미 간 3차 대화 등으로 넘어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 미 측은 이른바 '뉴욕채널'로 불리는 뉴욕 주재 북한대표부를 통해 향후 대화 일정과 의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美 "북미대화, 중요 이슈 미해결"(10/26,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무리된 제2차 북·미 고위급 대화와 관련, "일부 의견차를 좁혔으나 아직 중요한 이슈는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대화에서는 모든 이슈가 다뤄졌고,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돌파구(breakthrough)를 찾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강조



- 이는 미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측에 요구하고 있는 '사전조치' 가운데 일부는 이번 제네바 대화에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뤄졌으나 최종적인 합의를 도출하지는 못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뉴스는 전함.
  - 실제로 놀런드 대변인은 6자회담과 관련한 미 정부의 입장에 대해 "먼저 남북대화가 지속될 필요가 있고,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기존의 원칙을 반복하면서 "차이는 좁혀졌으나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거듭 지적
  - 그는 이밖에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에 대해 "(미·중) 양국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면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최근 방중을 언급
  - 이어 놀런드 대변인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말함.
- **北 "2차 북미대화서 일련의 전진 이룩"(10/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7일 최근 북한과 미국의 제2차 고위급 대화와 관련해 "지난 7월 말에 이어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는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일련의 전진이 이룩됐다"고 평가
    -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이같이 평가하고 "쌍방은 신뢰조성의 견지에서 미결문제를 토의해결하기 위한 조미(북미)접촉과 회담을 계속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힘.
    - 대변인은 또 "6자회담을 전제조건 없이 하루빨리 재개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을 동시행동의 원칙에서 전면적으로, 균형적으로 이행해나가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
  - **"北美 새 비핵화 로드맵 초안 단계"(10/27, 조선신보)**
    -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금 조(북)미는 6자회담이 재개됐을 때 확인될 새로운 비핵화 노정도(로드맵)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셈"이라고 보도
    - 이 신문은 27일 '제네바 조미회담, 비핵화 노정도에 대한 집중 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미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조치의 순번과 시점은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6자의 전체 구도에서 그것이 선차적인 과제로 상정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밝혀 북미 양측 간에 관계개선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
    - 조선신보는 "조선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교전상태로 인해 발생한 복잡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일괄타결안을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에 대한 조미 간의 논의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큰 걸음을 상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또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문제와 관련, "신뢰구축의 과정에서 풀어갈 수 있다"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행해야 할 9·19공동성명의 항목에는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수립도, 조선에 대한 경수로 제공도 있다"



고 밝힘.

### 3. 대남정세

- 류우익 장관 "이산가족 정기 상봉 여건 만들겠다"(10/24, 연합뉴스)
  -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24일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정기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겠다"며 "조만간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만나 북한과 협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류 장관은 이날 오후 통일부·경기도·연천군의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 업무협약(MOU)식에 참석해 전곡읍 마포리 사업 부지를 둘러보며 "이산가족 문제는 온 국민이 공유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함.
  - 이에 따라 통일부가 사업 주체로 재원을 마련하고 센터 건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도(道)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 행정협의를, 군(郡)은 관련 인·허가 처리와 토지보상 업무를 각각 담당한다고 뉴스는 전함.
  
- "청년이 앞장설 때"...北 재보선 막바지 선동(10/24.)
  -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새 정치는 청년들이 앞장설 때'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청년학생들은 이번 선거에서 반역적인 한나라당 정치를 매장할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며 "청년들이 앞장설 때 남조선 인민들이 바라는 새 정치를 안아올 수 있고 새 사회도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이어 "한나라당 정치는 청년들의 앞길을 망치고 미래를 말아먹는 정치"라고 비난
  - 또 이 매체는 '절실히 요구되는 진보세력의 단결'이라는 글을 통해 "남조선의 진보애국 역량은 강력한 투쟁으로 보수패당의 독재통치와 집권연장 기도를 저지파탄시켜야 한다"고 선동
  
- 北, 대북지원단체 대표단 평양 초청(10/25, 연합뉴스)
  - 북한이 정부의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대북지원단체 대표단을 평양으로 초청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국내 50여개 대북지원단체의 모임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에 따르면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는 지난 22일 북민협에 "평양에서 사업 전반에 대해 협의해보자"는 취지의 전통문과 초청장을 보내왔다고 뉴스는 전함.
  - 5·24조치 이후에도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이 모니터링 방북시 평양을 경유하거나 북측 민화협과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한 적은 있었지만 북측이 남측 지원단체 대표단을 평양으로 초청해 실무협의를 하자고 제의한 것은 처음임.





- 통일부는 그러나 24일 북민협이 제출한 방북 신청에 대해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이 없다"며 사실상 불허 방침을 통보해 지원단체 대표단의 평양방문은 무산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대북정책에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던 통일부가 원치만 앞세워 북측의 입장은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남북, 만월대 공동발굴 조속 재개키로(10/28, 연합뉴스)**

- 고려의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 발굴사업을 추진해온 남북 양측 실무자들은 28일 실무협의를 하고 5·24 대북제재 조치로 중단된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하일식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기획총괄위원장과 국립문화재연구소 관계자 등 전문가 5명은 이날 개성 민속여관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과 협의를 하고 발굴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이른 시일 내 만월대 사업에 나서기로 함.
-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7~8월 개성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발굴 지역의 수해가 컸다"며 "토사가 흘러내려 축대가 붕괴하는 상황까지 발생해 대응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함.

● **北, 南호국훈련 "북침전쟁연습" 비난(10/2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9일 남한 군대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괴뢰 호전광들이 미제 침략군과 함께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또다시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을 벌이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용납 못 할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
- 조평통은 이어 "괴뢰패당이 반공화국 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책동에 미쳐 날뛰수록 자멸을 앞당기는 것으로 될 뿐"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전쟁도발책동이 가져올 파국적 후과에 대해 똑바로 알고 무모한 군사적 망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덧붙임.



■ 기타 (대남)

-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를 "보수당국의 反인민적 정책을 비호한 인물"로, 박근혜 前 대표를 "내년 大選을 노리고 선거 지원에 나선 인물"로 폄하하며 "한나라당은 썩은 정치의 오물장"이라고 비난(10/24, 중통·노동신문)
- 李大統領의 訪美성과(동맹강화·韓-美 FTA 등)에 대해 "사대매국·반통일대결행각, 선거(10.26)에 영향을 주려는 打算" 등으로 持續 왜곡 비난(10/25, 중통·노동신문·민주조선·중방)
- 北, '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當選 소식을 전하며 "이번 선거결과는 보수세력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간략 보도(10/27, 중통)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中리커창 "6자회담 조속 재개해야"(10/24)

- 중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한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 24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부총리는 전날 최영림 북한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조선(북한)이 접촉과 대화라는 정확한 방향을 견지해나가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리 부총리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개선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지키는 것으로 관련국들의 공통 이익에 부합한다"며 "한반도 정세를 한층 더 완화시켜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북한과 중국이 과거 60년 동안 서로를 지지하면서 우호적인 이웃으로서의 관계를 공고히 한 것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적인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 리 부총리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양국의 전통적 우의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양국이 ▲정부 주도 ▲기업 중심 ▲시장 원리 ▲상호 윈윈의 4대 기본 원칙의 바탕 위에서 실무적 협력을 강화해나가지고 제안했다.
- 최 총리는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해 전면적으로 9.19 공동성명을 실천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자고 주장한다"며 "이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총리는 양국이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무역, 광업, 기초시설 등 분야에서 실무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가지면서 대대로 전해온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자고 덧붙였다.
- 한편 전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리 부총리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국에 초청하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보도했으나 신화 통신은 이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 리 부총리는 내년 중국 공산당 18차 당 대회를 계기로 윈자바오(溫家寶)의 뒤를 이어받아 총리직에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인물임. 그는 23~25일 북한을 먼저 방문하고 나서 26~27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6자회담 재개와 북핵 문제에 관한 북측의 메시지를 남측에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 美 "제네바 북미대화, 실무적 분위기 속 진행"(10/25)

- 빅토리아 놀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날 시작된 2차 북미 고위급 대화와 관련, "첫날 일정이 실무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 놀런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5일까지 진행될 이번 2차 북미 대화를 통해 미국은 지난 7월 1차 북미 뉴욕대화에서 북한에 요구한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지난 7월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1874호, 그리고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에 의해 규정된 비핵화 의무사항을 북한이 취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 조치들을 제시했다"면서 "따라서 이번 2차 대화에서는 북한이 1차 뉴욕대화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들의 비핵화 의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 놀런드 대변인은 또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입장도 듣기를 원하며,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어떤 지에 대해서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규모 식량지원을 하는 문제도 이번 대화에서 논의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됨.

### ● 北·美 이틀째 대화..北 UEP·인도지원 논의(10/25)

- 북핵 문제를 의제로 한 북미 2차 고위급 대화의 이틀째 회담이 25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시작됐음. 전날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회동했던 양측 대표단은 이날 북한 대표부로 장소를 옮겨 북한 우리농농축프 프로그램(UEP) 중단과 인도적 식량 지원 등 현안에 대한 대화를 이어감.
- 미국 측 수석대표인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첫날 회담과 마찬가지로 끝난 후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해 양측 간 대화 지속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도적 식량지원 등에 대한 '유용한' 대화가 있었음을 시사했음.
- 하지만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이틀째 회담 준비를 위해 이날 오전 8시15분께 숙소인 캄핀스키 호텔을 떠나 미 대표부로 향하면서 "회담 후에 얘기하겠다. (특별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음.
- 3개월 전 미국 뉴욕에서 열렸던 1차 대화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담은 이틀 만인 이날 오후에 종료될 예정임. 미국 측은 회담이 끝난 뒤 미 대표부에서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고, 북한 대표단도 별도로 짙막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이날 회담은 애초 오전 10시부터 주(駐)제네바 북한대표부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북한 측의 요청으로 회담을 오후에 오찬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고 미 측이 밝혔음.
- 앞서 북한의 리근 미국 국장만 북한대표부로 향하고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 무성 제1부상이 회담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까지 숙소를 떠나지 않았음.
- 북한 대표단의 숙소 안팎에서는 북한 대표단이 본국 정부의 훈령을 받고 회담 전략 등을 논의하는데 오전 시간을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올해 68세인 김 부상의 시차적응 어려움 등 건강 문제로 회담이 지연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음.

● <北美 '3라운드' 모색..긴박해지는 6자 전선>(10/26)

- 제2차 북미 고위급 대화가 막을 내리면서 6자 외교전선이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이번 대화의 결과물을 평가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하려는 각국의 전략적 행보가 활발하게 전개될 조짐임.
- 우선 대화국면의 중심축인 북미의 움직임이 주목됨. 성과와 한계를 내 부적으로 검토·정리하는 시간을 가진 뒤 관련국과의 조율을 거쳐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됨.
- 눈여겨볼 대목은 대화의 결과를 놓고 양측이 '온도차'를 보이는 점임. 북한 측 김계관 수석대표는 "일련의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으나 미국 측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차분해 보임.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측 수석대표는 25일 회담 직후 "긍정적이고 전체적으로 건설적인 대화"라고 정제된 '톤'으로 언급했고 이어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건설적이었으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고 평가했음.
-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알맹이 있는 진전'은 없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함. 다만 20년 넘게 북핵문제를 다뤄온 '노회한' 김계관 수석대표가 '커다란 진전'이라는 수식어를 동원한 것은 부분적 진전을 놓고 북한이 협상의 우위를 점한 것처럼 과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제네바 현지로부터 협상결과를 접한 정부의 핵심 당국자는 26일 "김대표의 발언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 보인다"면서 "양측이 크든 적든 대화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판을 깨지 않고 대화를 계속할 의지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진전"이라고 말했음. 특히 북한이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한 '조미(북미)간 신뢰구축 조치'는 한미가 요구해온 '사전조치'를 의미한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임.
- 다만 북한이 '진전'으로 느낄만한 요소들이 거론됐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측이 기대하는 대북 식량지원이나 그동안 '단골메뉴'로 주장해온 평화체제·협정 의제에 대해 미국 측이 다소 전향적 태도를 보였을 것이라 분석도 없지 않음.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북미 양측은 대화 결과를 서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며 관련국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시도할 개연성이 있어 보임. 북한은 특히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촉구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협의를 강화하며 '우군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측됨. 미국의 새로운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는 이번에 북측과의 '상견례' 결과를 들고 관련국들을 순방하며 대북 대응기조에 대한 컨센서스를 모으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후속대화의 시기와 형식은 관련국들과 조율 절차를 거치면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임. 시기는 다음 달 말 또는 12월 초순이 될 것이라 관측이 높은 편임.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대표를 맡고 있는 데이비스 대표는 인선절차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다음 달 중순



IAEA 이사회까지 치르고 이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형식의 경우 1, 2라운드와 같이 남북-북미대화와 같은 '역할분담형' 패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임.

- 후속대화를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한국과 중국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됨. 특히 한국은 후속 '3라운드'의 남북 비핵화회담을 주도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큼.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논의는 물론 '5자(한·미·일·중·러)협'의 프로세스를 적극 가동하며 남북-북미대화의 병용을 추동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우리 측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6일부터 사흘간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도 그 일환임.
- 6자회담 의장국을 자처하는 중국의 중재 움직임도 주목할 대목임. 중국 차기 지도부의 실세인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지 이틀만인 26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임.
- 한반도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러시아도 모종의 역할을 피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음.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달 1~2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임. 북일대화로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려는 일본 정부의 행보도 중요한 관심 대상임.

#### ● "北美 새 비핵화 로드맵 초안 단계" <조선신보>(10/27)

-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금 조(북)미는 6자회담이 재개됐을 때 확인될 새로운 비핵화 노정도(로드맵)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음.
- 이 신문은 27일 '제네바 조미회담, 비핵화 노정도에 대한 집중 논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미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취해야 할 행동조치의 순번과 시점은 아직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나 6자의 전체 구도에서 그것이 선차적인 과제로 상정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밝혀 북미 양측 간에 관계개선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음.
- 조선신보는 "조선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교전상태로 인해 발생한 복잡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일괄타결안을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비핵화를 향한 첫걸음에 대한 조미 간의 논의는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큰 걸음을 상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음.
- 또 우리나라 농축프로그램(UEP) 문제와 관련, "신뢰구축의 과정에서 풀 어갈 수 있다"며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행해야 할 9·19공동성명의 항목에는 조선반도의 평화체제 수립도, 조선에 대한 경수로 제공도 있다"고 밝혔음.
- 신문은 "지금도 교전상태에 놓여 있는 조미가 대결을 해소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한다면 핵문제의 근원이 풀린다"며 "그를 위해 조선과 미국에 해야 할 몫이 있고 현재의 대화는 가장 합리적인 문제해결의 입구를 마



련하기 위한 협상"이라고 덧붙였음.

#### ● <6자회담 한-러 수석대표 모스크바서 회담>(10/27)

-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과 러시아 측의 연쇄회담이 27일(현지시간)부터 모스크바에서 시작됐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이날 밝혔음.
-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외교부 차관과 한국 측 수석대표인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간의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음.
- 루카세비치 대변인은 "28일에는 안드레이 테니소프 러시아 외교부 제1차관 및 보로다브킨 차관과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간의 면담과 협상이 외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북한이 러시아 측과 연쇄 회담을 하는 식임. 그는 "이번 회동에서는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그러나 (남북러) 3자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음.
-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언론 보도문을 통해서도 한-러 간 회담 소식을 전하면서 "양측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의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음. 그러나 자세한 회담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전날 모스크바에 도착한 임 본부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모스크바 시내 외교부 영빈관에서 보로다브킨 차관과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러 양측은 회담에 이어 오찬을 함께하면서 추가로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전해졌음.
- 이날 회담에 참석한 한국 외교 소식통은 "우리 측이 이뤄진 남북한 간 접촉과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대화 결과 등에 대해 러시아 측에 설명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며 "한-러 양측이 6자회담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 이 소식통은 특히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 재개 사전 조건으로 북한에 제시하고 있는 ▲우리농축프로그램(UEP)을 비롯한 모든 핵활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대량살상무기(WMD) 실험 모라토리엄 선언 등에 대해서도 러시아 측이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임 본부장은 러시아 측과 추가 회담은 하지 않고 28일 출국할 예정임.
- 반면 27일 오후 모스크바에 도착할 예정인 북한 김 부상 일행은 28일 러시아 측과 회담을 하고 제네바 북미 고위급 대화 결과 등을 설명하면서 러시아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음.
- 최근 들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이슈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러시아는 남북한 양측의 입장과 제네바 북미대화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전해 들은 뒤 북한의 UEP 중단 등 6자회담 사전 조치 이행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한국·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조율하려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 <李대통령, 메드베데프와 北비핵화 논의>(10/28)

- 이명박 대통령은 내달 1~2일 러시아를 방문해 북한 비핵화와 남·북·러 가스관 건설 사업 등 동북아 현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음. 이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해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산·한·민·관으로 구성된 '제2차 한·러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임.
-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는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면서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의제가 자연스럽게 올라 올 것"이라고 말했음. 최근 한반도 정세는 제2차 북미 고위급 대화가 막을 내리고, 북한은 6자회담 당사국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한·러 정상회담인 만큼 이 대통령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가스관 건설사업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지난 1989년 현대건설 사장 재직 당시 구소련과 가스관 사업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험이 있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실제 한·러 양국은 지난 26일 장관급이 참석하는 '제11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고 가스관 설치가 현실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음.
- 그러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가스관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과 러시아인데 양국 협의에서 진전이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큰 논의를 할 만한 내용이 있을지는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음.
- 이 관계자는 "러시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소통해야 하는 나라"라면서 "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고려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 대학 동문이기도 하다"고 소개했음.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의 면담 계획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 ● <러-北 외교대표 모스크바서 6자회담 등 논의>(10/28)

- 러시아 외교부 안드레이 테니소프 제1차관과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차관이 28일(현지시간)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했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이날 밝혔음.
- 외교부는 이날 오후 발표한 언론보도문을 통해 러-북 간 회담 사실을 확인하면서 "양측이 지난 8월24일 러-북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한 양자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한반도 핵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음.
- 보도문은 이어 "김 부상은 24~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대화의 결과를 설명했다"면서 "러시아 측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필수적인 조건인 북미 대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 러-북 양측은 이어 앞으로 적극적인 외교적 협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데 공통의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도문은 덧붙였다. 27일 오후 제네바에서





모스크바에 도착한 김 부상 일행은 이날 러시아 외교부 인사들과의 회담을 마친 뒤 29일 북한으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남북한 수석대표로부터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남북 및 미국의 입장을 전해들은 러시아는 우리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사전조치 이행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한국·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를 조율하기 위한 막후 중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관측됨.

### ● <6자재개 숨고르기..3라운드 '최종답판' 모색>(10/30)

- 북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 재개 흐름이 '숨고르기'에 들어갔음.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2차대화의 결과를 관련국들끼리 공유·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대화의 방향을 모색하는 조정 국면임.
- 이에 따라 당분간 다양한 형태의 연쇄적 양자접촉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우리측 임성남 6자회담 수석대표와 북측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지난주 잇따라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은 이 같은 흐름에서임.
- 주목할 점은 조정국면이 길어질 가능성임. 가장 핵심적 관전포인트인 미국의 관련국 조율 행보는 다음달 하순에 가서야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통한 소식통들의 관측임. 미국 측 글린 데이비스 6자회담 수석대표 내정자는 다음 달 중순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를 마친 이후 북핵 업무에 공식 착수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미국의 '우보(牛步)' 행보는 행정적 또는 절차상의 이유에서만은 아님. 후속대화를 거당한 협상전략과 직결돼 있음.
- 무엇보다도 후속 '3라운드'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최종 답판'의 장이 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1라운드가 '탐색전'이었고 2라운드가 '본게임'이었다면 이제 3라운드는 '타결'의 장이 돼야 한다는 6자 내부의 암묵적 컨센서스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이런 맥락 속에서 북·미로서는 3라운드로 직행하기보다는 관련국 조율과 비공식 채널을 활용한 물밑교섭이라는 '사전정지'에 주력할 필요성이 큼. 2라운드를 거치며 드러난 양측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장외(場外) 협상에 공을 들일 가능성이 커진 것임.
- 지난주 막을 내린 제네바 북미대화에서는 북미 양측의 요구사항이 모두 협상테이블에 올랐다는 후문임. 미국 측이 요구한 비핵화 사전조치의 핵심은 '모니터드 섯다운'(Monitored Shutdown)이었다고 함. 영변의 우리농 축 프로그램(UEP)을 중단하고 이를 IAEA 사찰단이 확인·감시하는 개념의 일종의 '감시하의 중단'임. 우리농 축활동 중단이 없는 IAEA 사찰단 복귀와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유예)은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입장임.
- 미국은 특히 사전조치에는 '대가'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연계해 대북 식량지원이 제공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에 대해 북한 측은 UEP가 평화적 핵 이용이라며 UEP 중단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정한 대가가 있을 경우 이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미묘한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음.



- 김계관 제1부상은 지난 27일 제네바 북미대화를 마친 뒤 외신기자들과 만나 "우라늄 농축은 전기생산을 위한 평화적 핵활동이며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라면서 "그걸 그만두려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소식통들은 그 대가가 경수로 제공을 의미한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 북한은 또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평화협정·평화체제를 비핵화와 병행해 논의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번 대화를 전후해 '신뢰구축'과 9·19 공동성명상의 '행동 대 행동'을 강조한 것은 이런 맥락이라는 분석임.
  - 이 같은 대립의 핵심에는 서로 요구하는 사항들의 이행순서를 정하는 '시퀀싱(Sequencing)'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임. 미국 측은 비핵화 사전 조치에 대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사전조치를 우선으로 이행하고 경수로 제공과 평화협정·평화체제는 6자회담 재개 이후 일정시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정부 당국자는 30일 "평화협정·체제 논의는 비핵화 논의가 일정한 진전을 얻었을 때 별도의 포럼에서 가능하고 경수로 제공은 비핵화 논의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이는 9·19 공동성명에 모두 나와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측은 UEP를 중단하면 6자회담 재개시 비핵화 논의와 동시에 평화협정·평화체제 논의와 경수로 제공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임.
  - 양측의 이 같은 입장으로 볼 때 후속 '3라운드'로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음. 외교소식통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최소 한두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연내 후속대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음.
  -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분위기임. 대화의 흐름을 살리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해내기 위해 한국이 적극적으로 운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임. 지난 1, 2라운드와 같이 북미대화에 앞서, 12월 중으로 제3차 남북 비핵화 회담이 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음.
- **北김계관 베이징 도착.. 中우다웨이 만날 듯(10/30)**
-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북미 고위급 대화에 참석했던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30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음.
  - 김 부상은 베이징에 머무르는 동안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를 만나 북미 대화 결과를 설명하고 6자회담 재개의 조건과 절차에 대한 협의를 할 것으로 전망됨.
  - 베이징에서 출발해 평양으로 향하는 북한 고려항공 정기편은 화, 목, 토요일에 있어 김 부상은 이르면 내달 1일 귀국할 것으로 보임.



## 나. 미·북 관계

### ● "美, 대북 식량지원시 '분할 방식' 추진"(10/26)

- 미국은 조만간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미집행분' 33만톤을 한꺼번에 지원하지 않고 일정량을 나눠 북한에 전달하는 '분할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 또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는 미국의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 등 북핵 국면의 진전과 사실상 연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대북 현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현재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보다 나눠서 집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 미국은 2008년 5월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가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 등을 통해 각각 40만톤과 10만톤씩 50만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08년 9월 분배 투명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17만톤이 북한에 전달된 상황에서 지원이 중단됐음.
- 이후 미집행분 33만톤을 놓고 그동안 몇 차례 북한과 미국, 국제기구 간에 논의가 있었지만 천안함·연평도 사태 등 한반도 상황과 북핵 국면의 악화 등이 겹치면서 사실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 미국 정부는 대북 식량 문제는 철저하게 북한의 식량난을 감안해 결정하는 인도주의적 사안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음. 이와 관련,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인도적 지원 문제와 다른 정치, 정책적 이슈를 연계하지 않는다"면서 "식량지원 문제는 전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북한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 등을 평가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이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은 상태"라고 전제한 뒤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으려면 과거 문제가 됐던 현지의 (식량배급) 모니터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인도적 지원 문제와 다른 정치, 정책적 이슈를 연계하지 않는다"면서 "식량지원 문제는 전세계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북한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라는 판단 등을 평가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음.
- 미국 정부는 북한의 식량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북한에 실사단을 파견했음. 그러나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실질적으로 연동돼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한 외교소식통은 "북미 대화에서 비핵화 사전조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어떻게 개선되느냐에 따라 식량 지원문제가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소식통은 "미국은 비핵화 조치의 핵심사안으로 떠오른 우리농축수산물 프로그램(UFP)의 중단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식량지원 카드를 소진하지 않으려할 것"이라며 "내년을 강성대국 원년으로 설정한 북한은 내부 안정을 위해 식량지원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 1~8월 北美교역 작년동기 7배로 급증(10/26)

- 올해 1~8월 북미교역액이 21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간 30만 달러의 7배에 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했음. 미 인구조사국 신하 해외무역실 교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북미 교역은 미국의 대북수출만 210만 달러였고 수입은 한 건도 없었음.
- 1~8월 교역액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양국 간 교역액 190만 달러도 넘어섰음. 미국의 대북수출 상품을 보면 민간단체들이 대북지원용으로 보낸 구호물품이 대부분으로, 의약품이 절반가량 차지했고 나머지는 축산·수산 식품, 수술장비, 침구류, 재봉도구 등이었음.

### 다. 중·북 관계

#### ● 방북 리커창 부총리, 김영남 면담(10/24)

- 북한을 방문 중인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24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담화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리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조(중북)친선은 오늘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강화발전되고 있다"며 "조선인민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했음.
- 담화에는 북한 측에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영일 당 비서, 김성기 외무성 부상, 구본태 무역성 부상이, 중국 측에서는 장즈진(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 천위안 국가개발은행 이사장, 류제이(劉結一) 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류테난(劉鐵男)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등이 배석했음.
- 리 부총리 일행은 이날 김일성종합대 전자도서관을 참관한 뒤 교육설비와 도서를 기증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 ● 김정일, 방북 리커창 中부총리 면담(10/25)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4일 방북 중인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를 접견하고 만찬을 함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면담에서 평양에서 이뤄진 북중 간 회담이 잘된 것에 대해 평가하고 전통적인 양국 간 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시키려는 노동당과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중앙통신은 밝혔다.
- 리 부총리도 "중조(중북) 최고 영도자들 사이에 이룩된 광범위한 합의들을 성실히 이행하며 시종 전략적인 높이와 전망적인 각도에서 중조관계를 틀어쥐고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조강화의 정신을 견지함으로써 전통적인 중조친선을 공고발전시키자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방침"이라고 화답했음.
- 면담에는 북측에서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군 총참모장, 강석주 내각 부총리,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김영일·김양건 당비서 등이 배석했고, 중국 측에서 여우취엔 국무원 부비서장, 장즈진(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 천위안 국가개발은행 이사장,



류제이(劉結一) 당 대외연락부 부부장, 류테난(劉鐵男)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친젠(陳健) 상무부 부부장 등이 함께했음.

- 리 부총리는 김 위원장과 김정은 부위원장에게 선물을 전달했으며 김 위원장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만찬을 마련했음. 지난 23일 방북한 리 부총리는 25일 중국 베이징으로 잠시 복귀했다가 26~27일 한국을 방문함.

#### ● 北신의주-中단둥, 청소년 교류 협약(10/26)

- 북한 신의주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중국 단둥(丹東)과 청소년 교류 협약을 했다고 단둥일보(丹東日報)가 26일 보도했음. 신문은 단둥시 대표단이 신의주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초청으로 신의주를 방문, 지난 20일 이 협약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 북·중 교역량의 70%가 단둥-신의주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양 도시는 활발한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음. 그러나 청소년 교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앞서 북한 정무원 백순향 참사와 영광개발총회사 대표단이 지난 8일 단둥을 방문, 스펡(石光)시장을 만나 내년에 단둥에서 북·중 상품 전람회와 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열기로 합의하는 등 교류 확대를 꾀하고 있음.
- 동강(東港) 경제개발구를 조성 중인 단둥시는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6월 착공한 압록강의 섬 황금평 북·중 합작개발에도 적극적인 지원 입장을 밝혀왔음.

#### ● "北-中, 압록강 중류 별등도 개발 구상"(10/26)

- 북한과 중국이 압록강에 있는 북측 섬인 별등도(筏登島)를 관광지로 공동 개발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중국 측 지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음. 별등도는 중국 지안(集安)과 북한 자강도 만포(滿浦) 사이의 압록강 중류에 있고, 면적은 약 25ha임.
- 지난달 지안과 만포를 잇는 새로운 다리를 만드는 공사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강 하류 쪽으로 10km 정도 내려간 곳에 있음. 지안 시가지와 가까움. 이 섬에 북한 식당이나 토산물 판매점을 짓고, 북한 예술단체의 공연을 하게 한 뒤 지안과 별등도를 유람선으로 잇자는 게 개발 구상의 골자임. 별등도는 북측 육지와 떨어져 있어 북한이 사람이나 물자의 출입을 관리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 올 5월말 만포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의 대표단이 지안을 방문해 별등도 공동 개발 문제를 논의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북한과 중국은 두만간 하루 접경 도시인 북한 라선과 중국 훈춘(琿春), 압록강 하류 접경 도시인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丹東)을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했음. 요미우리신문은 "북중 국경 지대에서 북쪽 끝인 라선-훈춘과 남쪽 끝인 신의주-단둥에 이어 중부 지역에서도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음.



● "中 지하자원 싹쓸이에 北지도부도 우려"(10/26)

- 중국이 북한의 지하자원을 대규모로 수입하는 상황에 대해 북한 지도부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이 운영하는 북한연구소가 26일 전했다.
- 북한연구소는 이날 발간한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26호)에서 대북소식통을 인용, "김정은 공식 등장 1주년을 맞아 열린 경제정책회의에서 대중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열린 경제정책회의 및 간부회의에서는 새로운 경제정책이 많이 나왔는데 광물자원에 대한 외국인 투자규정을 강화하고 자체 기술로 광물자원을 생산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됐음. 또 중국의 무차별적인 '자원 싹쓸이'로 북한 내 지하자원이 너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이 나왔음.
- 일부 내각 일꾼은 경제학자들의 말을 빌려 "자원이 모두 원석으로 중국에 헐값으로 팔려나가고 있어 몇십 년 지나지 않아 모든 자원이 고갈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며 "중국의 광물자원 싹쓸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 북한의 대중 교역 의존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체 교역의 80%를 넘어섰으며, 대중 수출품은 대부분 석탄, 철광석, 아연 등 광물자원임. 북한 내 최대 구리광산으로 중국이 51%를 투자한 해산청년광산도 지난해 준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음.
- 소식통들은 그러나 "외국인 채굴권이나 경영권을 제한한다고 곧바로 수출이 줄 것 같지는 않다. 당, 군부, 내각 등 각 단위가 가장 쉬운 돈벌이를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北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 내달 완공(10/27)

- 중국이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라진항 활용을 위해 착수한 북한 원정리-라진항 구간 도로 보수공사가 내달 중순 완공될 것으로 보임. 연변(延邊) 소식통들은 27일 원정리-라진항 구간 도로 보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내달 15일께 완공된다고 밝혔음.
- 한 소식통은 "이미 2차선 비포장도로의 포장과 선형 개선 작업이 완료됐고 정리 작업을 하는 중"이라며 "북·중이 내달 15일께 완공을 자축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경사가 가파르거나 굴곡이 심한 일부 구간 공사는 내년으로 넘어갔지만 차량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 이번 공사는 중국의 대북 교역 거점인 훈춘(琿春)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두만강대교로 연결되는 원정리에서 라진항까지 53km 구간을 정비한 것으로, 지난 4월 공사에 착수했음.
- 중국은 훈춘 일대에서 생산되는 석탄 등을 남방으로 운송하기 위해 2008년 북한으로부터 라진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한 뒤 접근성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훈춘과 원정리를 잇는 두만강대교를 보수한 데 이어



지난 4월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에 나섰다. 다리와 도로보수 공사비는 모두 중국이 부담했음.

- 중국은 애초 올 연말로 잡았던 완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 9월부터 훈춘-라진항 구간 대형 화물트럭의 운행을 중단하는 등 공사를 서둘러 왔음. 도로 보수가 끝나면 이 구간 차량 통행 시간은 30분으로, 종전보다 절반가량 단축됨.
- 중국은 지난 1월 처음으로 1만7천t을 라진항에서 상하이로 운송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10만 가까운 훈춘산 석탄을 남방으로 수송했으며 원정리-라진항 도로 보수가 끝나면 운송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라진항이 본격 가동되면 연간 100만t의 석탄을 남방으로 운송할 수 있어 기존의 철도 수송에 비해 연간 6천만 위안(100억 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음.

#### ● "北, 석탄 수출 잠정 중단..내년 봄 재개"(10/27)

- 북한이 겨울철 연료난 해소를 위해 석탄 수출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중국 선양(瀋陽)의 대북 무역상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자국 무역상들에게 석탄 수출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 중국 무역상은 "며칠 전 북한 파트너로부터 상부의 지시에 따라 당분간 석탄 수출이 어렵게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미 계약한 물량 이외에는 북한산 석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음.
- 그는 "올해 북한의 석탄 수출량이 급증, 내수용 물량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갈수기라 수력발전소 가동이 안 되는 겨울철에 전력과 연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했음.
- 실제 북한은 올해 들어 대중국 석탄 수출량을 대폭 늘렸음. 중국 국문시보(國門時報)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월 중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량은 81만6천7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9배가 늘었음.
- 북한은 전력난이 심각했던 2009년 8월에도 석탄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가 이듬해 4월께 해제했음. 당시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고품질 석탄을 대량 수출하면서 심각한 전력난에 직면, 공장 등 산업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음.
- 그해 7월 열린 경제운용 점검을 위한 내각회의에서 김영일 총리가 공개적으로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음. 대북 무역상들은 그러나 북한의 이번 석탄 수출 중단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음.
- 한 대북 무역상은 "외화벌이를 전적으로 석탄과 철강 등 지하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북한으로서는 금수 조치를 오래 끌고 갈 수 없는 처지"라며 "연료 사용이 감소하는 내년 봄께 수출이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 **北총리, 中화전집단공사 사장 면담(10/27)**

- 북한 최영림 내각 총리가 원공민 중국 화전집단공사 사장을 27일 만수 대의사당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중앙통신은 "최영림 내각 총리는 이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원공민 중국 화전집단공사 총경리 일행을 만나 담화했다"며 "이 자리에는 허택 전력공업상, 김형식 석탄공업상, 신남철 조선영광개발총회사 총사장과 왕즈린(王治林)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경제무역 참사가 배석했다"고 전했다.
- 중국 화전집단공사는 발전과 관련된 회사여서 이번 방북 기간 북측과 발전소 건설 등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원 사장은 평양에 도착한 다음 날인 26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원장을 만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달했음.

● **中, 북한산 면화 첫 수입(10/28)**

- 중국이 처음으로 북한산 면화를 수입했다고 중국 국문시보(國門時報)가 28일 보도했음. 신문은 저장(浙江)성 자싱(嘉興)의 한 무역업체가 수입한 북한산 면화 68.5t이 최근 상하이로 통해 입항했다고 전했다. 북한산 면화가 중국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 면화는 kg당 2.3달러(2천550 원)로 총 수입액은 15만7천550달러(1억7천400만 원)임. 상하이 검역국은 6개 컨테이너를 전부 검역하고 무게를 확인하는 등 최초로 반입된 북한산 면화를 엄격하게 심사,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음.
- 북한은 국제사회 제재 이후 석탄과 철광 등 지하자원의 수출 물량을 대폭 늘렸으며 지난해 한국 정부의 5·24 조치로 남북교역이 중단된 뒤 농산물과 수산물의 중국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라. 기 타

● **WFP "10월 대북식량지원 올해 최대 규모"(10/26)**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10월 한 달 동안 북한주민 197만 명에게 식량을 지원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 지원 담당관을 인용해 26일 보도했음. 이는 WFP의 최근 1년 간의 월별 대북 지원식량을 놓고 볼 때 가장 큰 규모임.
- 스카우 담당관은 RFA 측에 10월에만 약 1만4천t의 곡물이 북한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지난달의 4천t보다 3배 이상 많은 곡물을 확보하면서 지원 규모도 커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핀란드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과 수재민 구호를 위해 95만 달러를 국제적십자사에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 **北고려항공, 내년 4~5월 유럽직항 운영(10/27)**

- 북한의 국적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평양~독일 베를린 직항편을 내년 4월과 5월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 보도했음.
- 스웨덴의 북한전문여행사인 '코리아 콘솔트'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 "고려항공이 2012년 4~5월에 베를린과 평양을 오가는 항공편을 운영하기로 해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유럽에서 바로 북한으로 갈 수 있게 됐다"며 직항편의 스케줄을 공개했음.
  - 직항편은 베를린에서 4월12일, 19일, 26일, 5월3일에 출발하고 4월19일, 26일, 5월3일에 평양을 떠남. 5월3일 이후에는 직항편이 없어 이날 이후 평양을 떠나는 여행객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돌아가야 함.
  - 최근 안전성과 서비스 등에 대해 혹평을 받고 있는 고려항공은 유럽여행객을 위해 2대뿐인 신형 항공기를 이 노선에 투입함. 고려항공이 2010년 구입한 러시아산 TU204-100은 유럽연합(EU)의 안전기준을 만족시키는 고려항공의 항공기 2대 중 하나로 176명을 태울 수 있음.
  - 이 여행사 관계자는 "유럽과 북한 간 직항노선이 개설된 것은 옛소련 붕괴 이후 처음"이라며 "정확한 항공일정과 요금은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음.

#### ● 북한군 대표단 베트남 방문(10/29)

- 오철산 해군 정치국장(상장)이 이끄는 북한군 대표단이 베트남을 방문했다고 국영 베트남 통신(VNA)이 29일 보도했음. 북한군 대표단은 28일 오후 응오수언릭 베트남군 총정치국장(중장)을 예방했음. 이 자리에서 릭 국장은 북한군 대표단의 이번 방문이 양국군과 인민 간 우호 증진과 상호 이해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VNA는 전했다.
- 오철산 정치국장도 이번 베트남 방문이 당(黨) 활동과 군 정치사업 분야의 경험을 공유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음. 북한군 대표단은 베트남군 해군사령부, 정치학원, 해군연구소, 7군구 총사령부 등을 방문할 것이라고 VNA는 덧붙였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美, 국방예산 무관하게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10/24)

-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국방비를 대규모 삭감하더라도 주한미군의 병력을 현재의 2만8천500명 수준으로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고 정부 고위소식통이 24일 밝혔음.
- 이 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국방부 관리들이 올해 여러 차례 한미 간 공식 회의에서 주한미군을 현행대로 유지할 것임을 확인했다"면서 "이런 의지에 따라서 오는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3차 한



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도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미 측은 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할 뿐 더러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주한미군 병력을 줄이는 것이 아시아에서의 전략과 이익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정부 소식통은 "미국 관리들은 중동지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의 변화와 관계없이 주한미군 병력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 아시아를 순방 중인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 10개국 국방장관과의 화동 모두 발언에서 "여러분 모두가 미국의 예산삭감 논쟁을 굉장히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시아 주둔 미군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께 확인한다"고 말했다.

#### ●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협의 얼마나 진척 됐나>(10/26)

- 우리 군의 미사일 최대사거리를 300km로 제한한 미사일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특히 미사일지침을 개정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필요성에 대해 양국 실무진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28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어떤 형태로든 의견 교환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임.
- 하지만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음.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문제가 두드러지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정책적인 의지에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는 속내로 풀이되고 있음.
- 국방부 관계자는 26일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가 SCM에서 다뤄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사안이 아니다"면서도 "기술적인 협의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이 미사일 대응능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양국은 SCM을 비롯한 각종 회의체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대응체계와 정보공유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9일 국정감사 질의답변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미사일지침 개정을 위한 실무적 접촉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사거리를) 얼마라고 지정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전체를 커버하는 거리가 되도록 기술적 접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일각에서는 사거리를 800km 또는 1천km 이상으로 늘리는 안을 놓고 양측 실무진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음. 남해안에서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넣으려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800~1천km 이상은 돼야 한다는 분석에서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미사일지침 개정 문제와 연계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하층 방어위주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미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런 체계가 구축되면 주한미군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와 패트리엇 미사일(PAC-2·3) 등 타격수단 운용에 관한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 중이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 소식통은 "주한미군과 협력해야 할 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한미 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국국방연구원(KIDA)과 미국 국방부의 미사일방어국(MDA)이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1979년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2001년 개정된 미사일지침은 우리나라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 탄두 중량은 500kg으로 제한하고 있음. 이 때문에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도 우리나라는 사거리 300km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음.

### ● 한미 군사위원회 개최..北 '불안정' 평가(10/27)

- 한국과 미국은 27일 제35차 한미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열어 대북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북한정세 등을 평가했음.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시 미국 합참의장이 공동 주관한 MCM 회의에서는 작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북한군의 동향을 분석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는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고 합참 관계자가 전했다.
- 양측은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포한 내년은 불안정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판단, 대북감시를 강화하고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번 MCM 회의에서 한측은 한국군이 추진 중인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 작업을 비롯한 미래 한국군이 지향하는 모습 등을 미 측에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 반면, 미 측은 최근 재정적자 확대에 따른 대규모 국방예산 삭감에도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한국 방어를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 정 의장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다원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시키기로 약속했다"면서 "한미 양측 군사지도자 간에 정상외의 비전이 구체적인 군사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뒷받침하자"고 말했다.
- 뎀시 의장은 "정 의장과 단독회담에서 한미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했다. 비록 지휘관계의 변화라는 현안이 있지만 이미 굳건한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일치했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모든 미국 장병을 대표해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고 진정으로 '같이 갑시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 김외교, 패네타 美국방과 방위동맹 재확인(10/27)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 중인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을 면담했음. 패네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미국 방문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으로



- 인해 양국 동맹이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음.
- 김 장관은 "지금까지 군사 위주였던 한미 동맹이 한미 FTA로 인해 전방위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음. 두 장관은 면담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굳건한 한미 방위동맹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페네타 장관은 또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했음. 이 대통령은 최근 미국 국빈 방문을 언급하며 "펜타곤에 갔을 때 환대해 줘서 고맙다"고 감사를 나타냈음. 이에 페네타 장관은 "이 대통령은 지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답했음.
  - 지난 26일 방한한 페네타 장관은 2박3일간 체류하며 김관진 국방장관과 SCM을 공동 주관할 예정임.

### ● 한미FTA, 10월 본회의 처리 사실상 무산(10/28)

-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10월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음. 여권은 당초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상임위 의결조차 끝내지 못했고, 이날 본회의 처리도 자동으로 불발됐음.
- 여권 핵심 관계자는 "비준안이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도 올라오지 않았다"면서 "10월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이 31일 하루인데 물리적으로 처리하기 힘들다"고 말했음.
- 현재 한나라당은 10월내 처리가 어려우면 늦어도 11월 초에는 반드시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5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 독소조항 폐기 없이는 비준안 처리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음.
- 특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5당 대표가 비준안 강행처리 결사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향후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다음번 본회의는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나 이에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처리 과정에서부터 충돌이 예상됨. 다만 협상파인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계속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어 막판 극적 타결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됨.
- 앞서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야5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한미FTA 대응방안을 위한 회담을 연 뒤 공동발표문을 통해 "지난 '끝장토론'을 통해 수많은 독소조항과 주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난 한미FTA를 비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음.
- 이들은 또 "야당이 요구해온 ISD 폐기,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 10개 분야에 대해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여당이 한미FTA 비준을 밀어붙인다면 야5당은 31일 공동 의총을 통해 힘을 하나로 모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연대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 손 대표는 이어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뒤 내년 총선에서 한미FTA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고 심판을 받자"면서 "총선에서 국민 의견이 결정되면 그때 가서, 즉 19대 국회에 가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그러나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정부 시대에 어렵게 체결하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마감하려는 한미FTA는 국운을 걸 수밖에 없는 국가의 큰 방침"이라면서 "한미FTA 비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 황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의총을 통해 재재협상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ISD 조항 폐기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협상에 입하지 않고 몸싸움을 해서라도 저지하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이 조항은 노무현 정부 때 채택된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이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성의를 다해 들어줬다. 단 하나 재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끝까지 몸으로 막는다면 정치 생명을 걸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 <한미, SCM서 北도발 고강도 대응책 마련>(10/28)

- 한국과 미국이 28일 열린 제4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강력히 공동대응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음.
-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SCM 회의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공동작계)을 수립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타격 수단을 동원하는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음.
- ◇국지도발 격퇴 공동작계 수립 = 작년 말 한국과 미국 합참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이를 발전시켜왔음.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국지도발 양상이 과거 행태와 근본적으로 다른 무모하고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양상으로 발전하는 데 대해 공동으로 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군 및 정부 당국의 인식에 따른 것임.
- 지금은 소규모 국지도발은 한국군이 작전을 책임지고 전면전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국지도발에 대해서는 주한·주일 미군, 태평양군사령부 소속 미군 전력을 투입해 공동으로 작전을 펼치겠다는 것임.
- 이에 미국은 전시에 동원될 전력 가운데 국지도발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전력 목록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하게 투입될 전력은 주한미군의 포병전력과 주일미군의 전투기, 해병대 등이 꼽히고 있음.
- 김관진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현재 완성 단계"라면서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만일 도발하면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



- 면전뿐 아니라 국지도발에도 한미가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동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공동작계는 북한의 도발시 초기에 한국군이 도발 원점과 주변세력을 격파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의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2차로 미군 전력을 증원하는 형식으로 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장관은 "만일 북한이 도발하면 국방장관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듯이 초기 자위권 차원에서 바로 응징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한국의 전력으로 할 것이고, 한미 공동 대응에서 그 시기가 되면 가용전력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군의 한 소식통은 "미 측은 이번 SCM 회의뿐 아니라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북한 도발시 원점을 비롯한 주변세력까지 격파하겠다는 한국군의 적극적 대북 억제개념에 대해 '확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에 한 측은 한미간 긴밀한 공조체제 및 연합위기관리 체계로 대응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 그러나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데 동의하고 공감했다"면서 "이런 동의 아래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北핵·WMD에 맞춘식 타격전략 개발 = 올해 SCM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WMD 위협에 대응해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도 특징임. 맞춤식 억제전략은 '족집게식 타격'으로 궤멸시킬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현대전의 수행 방식임.
  -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WMD 능력을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MD계획과 무관한 맞춤식 억제전략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미는 내달 초에 열리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부터 이런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기로 했음.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MD) 등의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기로 합의한 상태임. 이 때문에 도상연습인 TTX를 통해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기지 등을 격파할 수 있는 확장억제수단을 맞춤형으로 식별해 전략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장관과 페네타 장관은 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등 비대칭 군사위협 증가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뿐 아니라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공동인식을 재확인했다"면서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과 도발도 더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여기에다 양국이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대화체를 설립하기로 한 것도 이번이 처음임. 이 대화체에서는 사이버전의 위협에 대응해 사이버전 작전계획과 공격무기, 방호체계 등을 개발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간 우주협력 문제는 한측의 요구로 공동성명에 명시됐으며, 이는 양국의 안보협력 영역이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



다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 나. 한·중 관계

### ● 中어선, 왜 서해로 몰리나(10/24)

- 금어기(6-9월) 해제 이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86km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등 주말에만 총 4척의 어선을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 이달 초 중국 산둥성(山東省)을 출발한 이들 어선은 EEZ 외측수역에서 조업하다 기상 악화를 틈타 우리 어장으로 들어와 불법조업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중그물 사용, 어획량 축소보고, 조업일지 부실 기재, 무허가 조업 등 혐의도 다양했음. 특히 선원들이 목선을 주로 이용하던 과거와는 달리 빠른 300t급의 강선으로 무장해 해경의 단속과 추격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 이로써 금어기 해제이후 EEZ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붙잡힌 중국 어선은 모두 11척으로 늘었음. 이들에게 부과된 담보금도 5억 원에 달함. 이같이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최근 서해 바다가 멀치, 고등어, 조기 등 여러 어종으로 넘쳐나기 때문으로 분석됐음.
-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군산항으로 들어오는 우리 어선들도 대부분 만선일 정도로 정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군산해경 관할에서만 하루 평균 200여척의 중국어선이 EEZ 내외 측에서 조업을 하고 있어 단속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 ● 김정일 만난 中리커창 방한..오늘 李대통령 예방(10/26)

- 중국의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는 리커창(李克強) 국무원 상무부총리가 26일 오전 11시40분께 전용기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음.
- 지난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한 리 부총리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어서 북측의 메시지를 들고 와 우리 측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음.
- 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면담해 한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적 협력방안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리 부총리는 특히 이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과의 면담 내용 등 방북결과를 설명하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 위원장은 24일 리 부총리와의 만찬에서 6자회담 당사국은 동시행동의 원칙에 근거해 2005년 베이징에서 서명한 9·19 공동성명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며 6자회담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리 부총리는 27일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데 이어 경제4단체



장 주최 오찬에 참석하고 한국민속촌을 관람한 뒤 오후 귀국함. 리 부총리의 방한에는 장즈쥘(張志軍) 외교부 상무부부장 등 고위관리와 경제계 인사, 기자단을 포함해 80여 명의 대표단이 수행하고 있음.

- 리 부총리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평양을 방문해 북한 최고지도부와 면담한 뒤 25일 중국 칭다오(靑島)로 입국해 하룻밤 머문 뒤 이날 한국에 왔음. 리 부총리는 2005년 9월 랴오닝성 당서기 재임 시 방한한 바 있으며 이번 방한은 2008년 상무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임.

#### ● 김총리, 리커창 中부총리 접견..한반도정세 협의(10/26)

- 김항식 국무총리는 26일 오후 우리 정부 초청으로 공식 방한한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를 접견하고,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지역·국제무대 협력 방안 등을 협의했음.
-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리 부총리는 지난 23~25일 공식 방북 결과를 설명했음. 남북 관계 진전과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에 관한 의견도 나눴음.
- 양측은 또 이번 리 부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통화스와프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 설치 ▲고용허가제 ▲우리 신선농산물의 대(對)중국수출 관련 검역협력 등 4개 양해각서(MOU)·약정에 서명했음.
- 양측은 이와 함께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가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심화·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내년 한·중 수교 2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음. 이를 위해 고위인사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교류·에너지자원·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음.
- 아울러 '한·중 사회보장 협정' 체결 협상을 올해 안에 개시하고, 영사협정과 외교관여권 시증면제 협정, 청소년 수학여행단 시증면제 교환각서 등 3개 협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일괄 타결되도록 적극 협의하기로 했음.
- 김 총리는 이날 접견을 마친 뒤 리 부총리와 중국 대표단 일행을 삼청동 총리공관에 초청, 환영 만찬을 가졌음.

#### 다. 한·일 관계

##### ● 日 대법원, '근로정신대' 배상소송 기각(10/26)

-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에 의해 '근로정신대'로 강제연행됐던 한국인 근로자와 유족들의 법정 투쟁이 결국 결실을 보지 못했음.
- 일본 대법원은 유찬이(柳贊伊, 85)씨를 비롯, 일본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한 한국인 근로자와 유족 등 23명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不二越)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4일 기각했다고 법원 관계자들이 26일 밝혔음.





- 유씨 등은 1944~1945년 일본인 교사 등으로부터 "돈벌이가 된다"거나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 도야마(富山)의 후지코시 군수공장에서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 중노동에 시달렸음.
- 여자 근로정신대원으로 강제연행된 일부 한국인들은 1992년 후지코시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끝에 회사 측으로부터 '해결금'을 받아냈고 2000년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됐음. 그러나 이때 소송을 내지 못한 전 근로자나 유족은 2003년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사를 상대로 사죄와 미지급 임금 등 1억 엔을 지불하라고 요구하며 2차 소송을 냈음.
- 그러나 일본 법원은 2007년 9월 1심과 지난해 3월 2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한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논리로 잇달아 기각 결정을 내렸고,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했음.

#### 라. 미·중 관계

##### ● 中, 美에 "장기전략적인 새 관계" 촉구(10/24)

- 장예수이(張業遂) 주미 중국대사가 "이제 세계적 시각에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새 전망으로 중미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음.
- 장 대사는 23일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민간 차원의 미중관계 콘퍼런스에 참석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와 미 상원의 위안화를 겨냥한 환율 평가절하 보복법에 대해 '적절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음.
- 그는 먼저 양국관계를 개괄하면서 "지난해 무역규모는 3천850억 달러에 달했고 미국은 제1의 대(對) 중국 투자국이며 중국은 제1의 대미 채권국"이라면서 "갈수록 양국 간에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긴밀해져 가고 있다"고 소개했음. 아울러 "양국은 여러 방면에서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고 국제이슈에 대해서도 소통과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는 그러나 "양국은 정치체제, 사회적인 가치, 역사·문화적 전통 등이 달라 간혹 양국 간에 오해와 불신이 조성되기도 한다"며 "그런 탓에 이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음.
- 장 대사는 이어 "무엇보다 세계화와 긴밀화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은 하나의 이익 공동체로 변해간다는 점에서 서로 '제로섬' 관계를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양국이 오해와 불신을 피하면서 전략적인 신뢰를 구축하려면 양국 간 전략경제대화와 아시아·태평양 사무협상 등의 기존 틀을 통해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이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 ● 中, 美에 대만무기판매 철회 재차 촉구(10/27)

- 중국 국방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결정을 철회하라고 미국에 재차



- 촉구했음. 양위준(楊宇軍)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월레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과 지속적인 군 관계발전을 유지하려면 미국이 대만에 무기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7일 보도했음.
- 양 대변인은 대만에의 무기판매는 중국과 미국이 1982년 8월 체결한 코뮌iqué에 어긋나는 행위라면서 "미국이 일부 이슈를 다루는 방법은 전문적이지도 외교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음. 그의 이런 언급은 미국이 대만의 전투기 145대의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58억 5천만 달러의 무기 판매 패키지를 판매기로 한 것을 겨냥한 것임.
  - 그는 "미국의 잘못된 결정으로 중국의 핵심이익이 크게 손상됐을 뿐더러 양국 군 관계도 크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양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의 무기판매 결정을 철회해 중미 간의 군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이면서 믿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마. 미·러 관계

##### ● <러-美 입국 금지 '블랙리스트 전쟁'(10/25)>

- 러시아와 미국이 '블랙리스트 전쟁'을 벌이고 있음. 미국이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사망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 관리들을 포함한 러시아인 입국 금지자 명단을 만들고 이들의 입국을 금지한 데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도 자국 입국을 금지하는 미국인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음.
-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5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러시아 입국과 체류가 불가능한 미국인 명단이 작성된 사실을 시인하면서 "이 명단이 미국 명단보다 더 크다"고 밝혔음. 러시아가 미국이 입국 금지한 자국인 수보다 더 많은 미국인을 입국 금지했다는 의미였음.
-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 측은 일방적으로 이 '블랙리스트' 명단에 해당자를 더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블랙리스트에 마그니츠키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러시아를 비판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포함됐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입을 다물었음.
- 마그니츠키 사망 사건은 영국 투자펀드 '헤리티지 캐피털(Hermitage Captital)' 소속 러시아 변호사 마그니츠키가 2008년부터 자국 검찰과 경찰, 판사, 세관원 등 고위공무원들이 연루된 대규모 비리사건을 파헤치다가 탈세방조 혐의로 기소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2009년 11월 구치소에서 숨진 사건임.
- 구치소 측은 마그니츠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유족과 인권단체 등은 그가 부패 사건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음. 구치소 관리들이 의도적으로 채장염 치료 등 마그니츠키의 질병 관리를 소홀히 해 그가 숨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내외의 비판이 비등했고 결국 사건은 인권 문제와 외교 문제로 비화했음.
- 미국은 지난 7월 마그니츠키 사망 사건에 연루된 러시아 관리들을 입국



금지 대상인 비자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켰고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체 블랙리스트를 만들었음. 러시아 블랙리스트엔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러시아인 무기 밀매상 빅토르 부트 체포에 관여한 미국 관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바. 중·일 관계

### ● 일본-베트남 방위협력 각서.. "남중국해 中 견제"(10/25)

- 일본과 베트남이 남중국해 진출을 노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방위협력 각서를 교환했다고 일본 언론이 25일 전했다. 이치카와 야스오(一川保夫) 일본 방위상은 24일 방위성에서 풍뎡타잉 베트남 국방부 장관과 회담하고 '방위 협력·교류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음.
- 각서에는 양국 방위 당국의 차관급 정기 교류와 자위대 등 실무 수준의 상호 방문 정례화 등의 내용을 담았음.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양국이 협력해서 구원 활동을 한다고 명기했음.
-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와 이같은 각서를 교환하기는 2009년 12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임. 양국 방위 책임자는 베트남과 중국이 영유권을 다투는 남중국해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고, 관계국이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의견 일치를 봤음.
- 이치카와 방위상은 24일 회담에서 "일본과 베트남의 관계가 새로운 발전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베트남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인 만큼 연계를 강화 하겠다"고 말했음. 풍뎡타잉 장관도 "양국은 매우 중요한 관계"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하기는 13년 만이었음.

### ● 日, 中 견제 위해 인도와 협력 강화(10/30)

- 일본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와 국방·경제 분야 협력을 가속하고 있음. 30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지아이신문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외무상은 29일 도쿄에서 열린 S.M. 크리슈나 인도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원자력 협정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음.
- 일본과 인도는 원자력 협정 협상을 작년 6월 시작했으나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나면서 중단됐음. 일본은 인도와 원자력 협정을 통해 원전의 수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양국은 희토류의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해 희토류의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는 데도 합의했음.
- 양국 외교장관은 또 일본의 해상자위대와 인도 해군의 공동훈련을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일본과 인도의 공동 군사훈련은 지금까지 미국과 함께 했지만 향후 2국간 훈련을 검토하기로 했음. 공동훈련은 해적 대책 등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것임. 하지만 일본과 인도의 해상교통로는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과 마찰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를 포함하고 있어 중국 견제의 의미



가 강함.

- 양국 외교장관은 미국과 일본, 인도의 3개국이 해양 안보 등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회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음. 이들은 다음 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항해의 자유와 국제법 준수를 협의하는 한편 중국에 '책임있는 대국으로서의 자세'를 촉구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음.
- 양국 외교장관은 이를 위해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공조도 가속화하기로 했음. 일본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연내 인도를 방문해 결속을 다지고 원자력 협정 등 현안을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